

1.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35)

대학생 대상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확대* 하여 대학의 종합적인 취·창업지원 역량강화 및 학생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16년 41개교 → '17년 60개교로 확대

- 기존의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8년부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사업을 일원화 할 예정입니다.

* (대학청년고용센터) '16년 24개교 → '17년 14개교 (취업지원관) '16년 15개교 → '17년 6개교

- 또한, 사업비 5억 중 1억을 증액*하여, 학생 대상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사업비 증가분(1억)은 정부+대학 각 50% 매칭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 추진배경 대학의 종합적인 취·창업지원 역량강화 및 학생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 강화를 위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 주요내용
 - ①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16년 41개교 → '17년 60개교)
 - ② 총 사업비 증액(대학당 5억원→6억원)
 - * 증가분(1억)은 정부+대학 각 50% 매칭하되, 대학별 학생 대상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 지원
- 시행일 2017년 3월

2. 모든 사업장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56)

2017.1.1.자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 2017.1.1.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2016.1.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됩니다.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은 2016.1.1.부터 시행

-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들의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년이 미적용

- 만약,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알기쉬운 60세+ 정년제 30문30답” 자료 참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

2017년도 정년 60세 의무적용 사업장 범위 확대

- 추진배경 세계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장년층의 규모·비중 증가 전망 등에 따라 정년 60세 의무 시행
- 주요내용 ① 2017.1.1.부터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정년 60세 이상 적용
②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시행일 2017년 1월

3. 최저임금 인상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201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47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2,230원(6,470원×209시간)입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823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17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고시

최저임금 인상

- 추진배경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7년 최저임금 인상
- 주요내용 2017년 최저임금 : 시간급 6,470원
* 일급 8시간 기준 51,760원, 월급 1,352,230원(6,470원×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4. 단기 체험프로그램,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으로 통합

|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35)

단기 기업탐방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강소기업탐방(1일 5시간 이상) 및 중소기업 취업
연수지원(2박3일)을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5일 이내)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통합 운영을 통해 예산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중소·강소기업에 대한 인식제고·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기체험 프로그램,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으로 통합

- 추진배경 단기 기업탐방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① 강소기업탐방 및 중소기업 취업연수지원 →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으로 통합
② 5일 이내 중소·강소기업 체험을 통해 인식제고 및 인력미스매치 해소 지원
- 시행일 2017년 3월

5. 재학생 직무체험, 5천명 목표로 본격 사업 추진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35)

'16년 하반기 시범추진 하였던 재학생 직무체험 사업을 '17년 5천명 목표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생들의 재학 중 직무체험 수요 및 지원요구를 수용하고, 조기 진로준비 및 입직기간 단축을 지원하게 됩니다.

* 단, 공학계열 및 대학 최종학기 재학생은 참여제한

- 운영기관인 대학은, 전문대(3년제 포함)를 비롯하여 4년제 등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라면 모든 대학이 참여 가능합니다.

-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7.3월부터 참여기업 관리자 지원금* 및 운영기관 관리비** 단가가 조정됩니다.

* 참여기업 관리자 지원금 단가 조정(월 20~40만원 → 학생 1인당 월 7만원)

** 운영기관(대학·민간위탁기관) 관리비 단가 조정(월 3만원 → 월 1만원)

재학생 직무체험, 5천명 목표로 본격 사업 추진

- **사업목표** 5천명을 목표로 '17년 본 사업 추진
- **참여대상** ① 학생 : 모든 대학재학생(단, 공학계열 및 대학 최종학기 재학생은 참여제한)
② 운영기관 : 전문대(3년제 포함), 4년제 등 모든 대학(단, 정부재정지원가능 대학에 한함)
- **지원금 단가 조정** ① 참여기업 관리자 지원금 단가 조정(월 20~40만원 → 1인당 월 7만원)
② 운영기관 관리비 단가 조정(1인당 월 3만원 → 1인당 월 1만원)
- **시행일** 2017년 3월

6. 청년내일채움공제, 5만명 목표로 본격 사업추진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95)

'16년 하반기 시범추진 하였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17년 5만명 목표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 및 300만원을 지원하여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 본인적립 300만원 +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 + 기업기여금 300만원 → 1,200만원+α(이자)

- 특히, '17년부터는 청년취업인턴제 뿐만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I·II 유형), 일학습병행제 수료 청년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 청년인턴 3만명, 취성패 1만7천명, 일학습병행 3천명

청년내일채움공제, 5만명 목표로 본격 사업추진

- **사업목표** 5만명을 목표로 '17년 본 사업 추진
- **참여대상**
 - ① 청년: 만 15~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② 기업: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벤처기업지원업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지원내역**
 - ①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 지원
 - ② (정부→기업) 채용유지지원금 2년간 500만원 지원(300만원 자산형성 기여)
* ('16년) 인턴지원금+정규직전환지원금 2년 390만원 지원(300만원 자산형성 기여)
- **시행일** 2017년 1월

7. 생애경력설계 기회 대폭 확충

|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0)

‘준비 없는 퇴직’으로 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장년에게 직업훈련,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종합 검진 기능’을 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 우선, 장년이 연령에 따라 생애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도 기존에는 재직근로자에 한정하였으나, 구직자까지 확대하여 희망하는 장년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도 종전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뿐만 아니라 민간훈련기관까지 다각화하여 사업주가 민간위탁을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용(훈련비)를 지급합니다.

* '16년 1만명(공공서비스) → '17년 2만명(공공서비스) + α(사업주 제공과정)

- 한편, 관련법령에 정부의 생애경력설계기회 제공 노력 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생애 경력설계서비스를 필수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중

2017년도 생애설계서비스 확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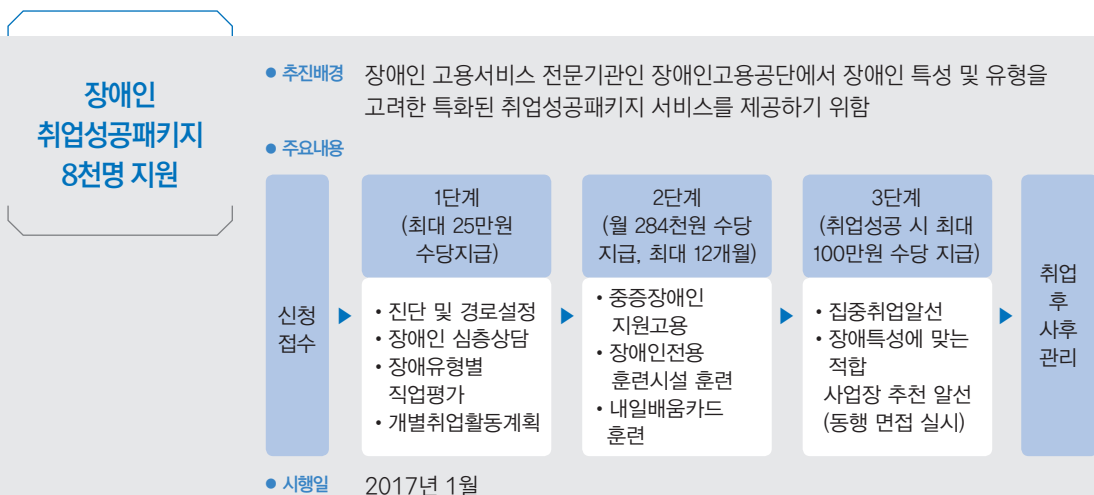
- 추진배경 주된 일자리 조기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에 장기간 재취업하는 장년에게 고용종합검진 기능을 하는 생애설계서비스 확대 필요
- 주요내용
 - ① 장년이 생애 3회 이상 경력설계서비스 받도록 지원
 - ② 생애설계 지원대상자 확대(현행: 재직자 → 개선: 재직자+구직자)
 - ③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현행: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개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사업주 제공과정)
- 시행일 2017년 1월

8.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8천명 지원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5)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장애인은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과 통합하여 전국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 '17년 1월부터는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특화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전문상담원의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최대 12개월의 2단계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장애인 훈련비용 지원 강화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2)

인적자본이 취약한 장애인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훈련비용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훈련 중 생계부담 등으로 많은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기피하였으나, '17년 1월부터 장애인 훈련 수당이 월 16~27만 원에서 31.6~40만원으로 인상되어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우수 민간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훈련비 지원단가도 평균 3,750원에서 6,511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 훈련비용 현실화

- 추진배경 장애인 직업훈련 기회 확대
- 주요내용
 - ① 장애인훈련수당 인상
-('16년) 월 16~27만원 → ('17년) 월 31.6만원(취업성공패키지 40만원)
 - ② 장애인 훈련비 지원단가 인상
-('16년) 3,750원 → ('17년) 6,511원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10.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물량 확대 및 임금단가 인상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의 물량을 88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시간당 임금단가를 6,300원에서 6,520원으로 인상합니다.

-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사업장에 배치하여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지원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근로지원인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 지원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시간당 기준 단가가 '17년부터 220원 인상(6,300원→6,520원)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 응자·지원 규정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물량 확대 및 임금 단가 인상

- 추진배경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서비스 품질 향상
- 주요내용 ①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단가를 6,300원에서 6,520원으로 인상
② 근로지원인 물량을 88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

1. 농어촌마을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정비 지원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개발과 (☎ 044-201-1559)

노후 및 슬레이트 주택 등이 많아 주거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마을을 중심으로 2017년 주택정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금액을 당초 54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집수리 등 주택 정비 시 기존에는 수급권자에게만 지원금액의 100%를 지급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차상위 계층(기존 90%)까지 확대하여 100% 지원합니다.

[참고] 새마을 홈페이지(www.region.go.kr)>알림>가이드라인 및 지침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위생·안전에 취약한 농어촌마을의 기초생활인프라를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
- 주요내용
 - ① 슬레이트 지붕개량 : 가구당 540만원(수급권자 100%, 차상위 90%, 일반가구 70%~50% 보조) → 700만원(수급권자와 차상위 100%, 일반가구 70%~50% 보조)
 - ② 집수리 지원 확대(가구당 700만원 기준) : 수급권자 100%, 차상위 90%, 일반가구 50% 보조 → 수급권자 및 차상위 100%, 일반가구 50% 보조
- 시행일 2017년 1월

2.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 044-201-2341)

2017년부터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고등학생까지 확대됩니다.

-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이 제외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학생과 동일하게 학교 우유급식이 무상 제공됩니다.

* 지원내용 : 학기중 및 방학중 우유(200ml/430원 이내)를 1년 250일 내외 지원하여 청소년 건강증진 도모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 추진배경 저소득층 청소년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증진 도모
-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 학교 우유급식 무상 지원
- 시행일 2017년 1월

1.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02-2110-3731)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지원해주기 위한 진술보조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민사소송법」이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 필요한 진술이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진술보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약자의 사법복지 증진이 기대됩니다.
- 또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하여 제한능력자의 사법접근권 향상을 도모하였고,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개정 민법의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에 맞추어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소송능력이 제한됩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민사소송법 검색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 추진배경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 지원 및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정비
- 주요내용
 - 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 확대
 - ②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 신설
 - ③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진술보조 제도 도입
- 시행일 2017년 2월 4일

1.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 044-202-2745)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어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을 각각 20%p 인하하여 임신 전 기간의 외래진료 의료비가 낮아집니다.

*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

** 임신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 44만원→24만원

-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하여 다태아 임신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 적용하여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 완화할 예정입니다.

* 종별 의료기관 본인부담률의 70% →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 10%

201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추진배경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주요내용 ①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의료기관 종별 각각 20%p 인하
② 다태아 임신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70만원→90만원)
③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시행예정

2.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 044-202-2731)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을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임대료,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비용 지원

-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하여 급여를 지원합니다.

* 휴대용 산소발생기 20만원/월, 기침유발기 16만원/월

- 자가도뇨카테터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를 현행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자가도뇨카테터 : 척수 장애인 등 자력으로 배뇨가 곤란한 환자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방광으로부터 소변을 비워 주는데 사용하는 도뇨관

* 신경인성 방광환자 소모품 지원 비용 : 1일 기준 9,000원(최대 6개)

-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도 인상하여 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위생관리 및 감염예방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자동복막투석 :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몸 안에 있는 복막을 이용하는 투석 방법으로, 주로 수면시간에 기계가 투석액 교환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방법

* 기준액(일) : (현행) 5,640원 → (변경) 10,420원

2017년도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 추진배경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①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하여 급여 지원
 - ②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 확대 지원
 - ③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 인상(5,640원/일 → 10,420원/일)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2

'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17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6년 439만원에서 '17년 447만원으로 1.7% 인상되었습니다.
 - 또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 이에 따라 '17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16년 127만원 대비 5.2% 인상)하며
 -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7년도부터는 134만원으로 인상이며, '16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7만원 가량 인상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기초수급자, '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

'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

- 추진배경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
- 주요내용
 - ① '17년 기준 중위소득 : '16년 대비 1.7% 인상
 - 4인가구 기준 ('16년)약 439만원 → ('17년)약 447만원
 -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6년)29% → ('17년)30%로 확대
 - 4인가구 기준 ('16년)약 127만원 → ('17년)약 134만원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4. 노인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공표 등 「노인복지법」 개정 시행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 044-202-3452)

'16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 제한, 노인학대시설의 명단 공표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14개 직군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 현재는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는 신고할 수 있고,
 - 특별히, 의료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8개 직군*은 직무수행 중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노인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인의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16년 12월 30일부터는 의료기관의 장 등 6개 직군*도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16년 12월 30일부터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의 확정·집행종료·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노인학대관련 범죄전력자)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 노인관련기관(법 제39조의17):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보건센터

보건복지부

- 따라서, 행정기관은 노인관련기관의 설치신고 및 인·허가 등을 신청 받은 경우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관서를 통해 조회해야 합니다.
- 또한, 노인관련기관을 운영자는 직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취업 및 노무제공 대상자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관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16년 12월 30일부터 관할행정기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폐쇄를,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폐쇄요구 및 해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은 해당 시설을 직접 폐쇄하거나 인·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16년 12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로 형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처벌내용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습니다.

* 법 제39조의9(금지행위):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및 방임, 경제적 학대,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는 행위

-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로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명단과 법 위반 이력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16년 12월 30일부터 도입되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노인학대범죄 전력자의 노인관련시설 취업 제한, 노인학대가 일어난 법인과 시설의 명칭 공표, 노인학대가 일어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단 공표제도의 도입이 앞으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조기발견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16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노인복지법」 주요 내용

- 추진배경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전 국민 노인학대 인식 개선
- 주요내용 ①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확정된 자는 10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② 노인학대 금지행위로 처벌 받은 법인 등 운영시설에 대한 명칭 공표, 노인학대가 일어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단 공표
③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8개→14개 직군)
- 시행일 2016년 12월 30일

5.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044-202-2515)

내년에는 55-74세의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이번 시범사업은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주요 과제인 폐암검진의 검진 절차와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 2017년에는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 8,000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 * 일반 CT보다 방사선 피폭량을 줄여 촬영하는 것으로 피폭량이 약 10분의 1 수준
 - 시범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검진 결과 통보시 금연 교육을 병행하여 금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는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 **주요내용** ① 55-74세 30갑년 이상 고위험흡연자에 대해 저선량 CT를 통해 실시
 ②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000명에 대해 시범 시행
 ③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실시
- **시행일** 2017년 3월

6.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 맞춤형복지차량 지원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 증액 -

보건복지부 | 지역복지과 (☎ 044-202-3122, 3124)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2,100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17년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2,100개 읍면동 전체에 ‘맞춤형 복지 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맞춤형 복지 차량’ 지원으로 찾아가는 상담이 더욱 활성화되고, 특히 관할지역이 넓은 읍면의 복지 공무원의 기동성을 높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 그리고 기준에 맞지 않아 공적 복지서비스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복지자원 연계가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사례관리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예산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 읍면동당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84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여 더 많은 복지 사각지대를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주요내용

- 추진배경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2,100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을 인상할 계획
- 주요내용 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중심(Hub)기관으로 개편하여 복지기능 강화
 -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상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추진② ('16년) 933개→('17년) 2,100개→('18년) 3,502개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
- 시행일 2017년 1월

7.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 보건복지부 | 자립지원과 (☎ 044-202-3072)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기준 및 가입 기간 중 소득 유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중 일정소득** 이상 가구만 가입 할 수 있었고

* 기준 중위소득50%(179만원, '16년 3인가구 기준)이하로 수급권자가 아닌 자

** 기준 중위소득 50%의60%(107만원, '16년 3인가구 기준)

- 가입 기간 중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면, 통장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 앞으로는 가입일 현재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에 해당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또한, 가입 기간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까지 증가한 가구도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 기준 완화 주요내용

- **추진배경**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대상 확대 및 중도 해지 기준 완화로 근로빈곤층의 중산층으로의 진입 지원 강화
* 가입 가구가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1:1 추가 매칭 지원하여 3년 후 720만원 + 이자 수령
- **주요내용**
 - ① 통장 가입 가구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의 60%이상~기준중위소득 50%이하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② 통장 가입 기간 중 유지하여야하는 소득 기준
-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의 60% → 기준 중위소득의 70%
- **시행일** 2016년 10월

8.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 보건복지부 | 자립지원과 (☎ 044-202-3073)

차상위자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과 근로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의 소득환산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2000cc 미만 승용차의 소득 환산 시 ①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②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③ 차령 10년 이상의 경우에만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100%를 적용하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 2017년에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며, 현재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도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함으로써 차상위 계층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희망할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 추진배경 차상위 계층의 자활사업 참여 촉진을 통한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
- 주요내용
 - ① 차상위 자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의 소득환산율 완화
 - 적용 대상 : 승용차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중 소득환산율 4.17% 적용 차량
 - (기존) 생업에 사용,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차령 10년 이상 → (변경) 기존 3가지 경우 외 2000cc미만 중 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 추가
 - ② 적용대상 사업 : 자활근로 사업 및 희망키움통장(Ⅱ) 지원 사업
- 시행일 2017년 1월

9. 전국에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설치

|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044-202-3302)

지속 발생하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및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신설*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근거를 마련('17.1.1. 시행)하여, 중앙 권익옹호기관(1개소) 및 시·도별 지역권익옹호기관 (17개소)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둔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학대 사고의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피해 장애인 응급보호 및 회복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 계획

- 추진배경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종합 지원
- 주요내용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 및 지역(시·도별 17개소) 설치
 - 중앙옹호기관 : 장애인학대 실태조사, 학대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 지역옹호기관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사후관리 등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 * 지역옹호기관은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개소일은 조정될 수 있음

10.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전국 17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행동발달증진센터(2개) 본격운영)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7)

인지·의사소통 영역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210천명)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해 17개 광역지자체 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복지, 고용, 교육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 또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지원, 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된 재판의 보조인으로 참석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와 함께, 자해나 공격 등 발달장애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를 각각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한양대병원에 운영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1)발달장애인 복지와 권리보호를 위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출범, 2)발달장애인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쉬워진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운영

- 추진배경 발달장애인 복지 등 지원 및 권리 보호
- 주요내용 ① 광역지자체 단위 17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 복지, 고용, 교육 등 서비스 맞춤형 제공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범죄 피해시 현장조사, 보호조치, 공공후견인 지원②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을 통한 자해, 타해 등 행동문제 치료 지원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1.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 여성가족부 | 청소년정책과 (☎ 02-2100-6241)

만 9~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됩니다.

- 지금까지 청소년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금융기관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대중교통·여가시설·문화시설 이용 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위한 증표로 이용되었으나
 -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청소년증 기능 확대

- 추진배경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① 청소년증 신청 시 교통카드 선택 가능(3개* 중 택일)
 -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 ② 대중교통 또는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가능
- 시행일 2017년 1월 11일

여성가족부

2. 위기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 여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75/6272)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222개에서 224개로, 가출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청소년쉼터**도 119개에서 123개로 확대됩니다.

* CYS-Net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경찰청, 청소년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위기청소년 발견,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 조기발굴 및 일시보호, 생활지원(의·식·주), 상담·교육,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여 탈선 예방 및 건강한 성장 도모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066명에서 1,146명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참고| 위기청소년 지원 및 상담 전화 ☎ (지역번호)1388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위한 민간차원의 서비스 시설(일명 ‘청소년 회복센터’)을 법정화하여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보호처분(총 10종)

위기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 추진배경 지역 기반의 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 주요내용
 - 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지역 확대(222개→224개)
 - ② 청소년쉼터 확대(119개→123개)
 - ③ 청소년동반자 확대(1,066명→1,146명)
 - ④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2016.11.30. 시행)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 제공(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 11㎡이상의 단독·연립주택 등)
- 시행일 2017년 상반기

3.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대운영

[여성가족부 | 복지지원과 (☎ 02-2100-6425)]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강화합니다.

- 폭력피해 여성 및 동반 가족의 자립을 위한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 주거지원 20호를 신규 공급하고,
-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을 보호하고 주거를 지원하는 보호시설 2개소(쉼터 1개소, 그룹홈 1개소)를 확대합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16.7.1. 기준, 단위: 개소, 호)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임대주택 주거지원	276	10	42	20	18	20	22	28	24	10	11	-	10	-	10	42	9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28	7	1	2	1	1	1	1	3	1	1	1	2	2	2	1	1

- 또한 사이버 및 모바일로 365일 24시간 실시간 채팅상담 및 신고 연계가 가능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를 '17년부터 본격 운영하며

※ 여성폭력사이버상담신고센터 홈페이지 주소 : www.womenhotline.or.kr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비수급자)에 대한 주·부식비 등 생계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생계비 : ('16년) 621백만원 → ('17년) 722백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피해자 지원확대

- 추진배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인프라 등 확대
- 주요내용
 - ①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시설 확충(276호→296호)
 - ②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확대(28개소→30개소)
 - ③ 여성폭력사이버상담신고센터 운영
 - ④ 보호시설 입소자(비수급자) 생계비 지원확대(621백만원→722백만원)
- 시행일 2017년 1월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 | 복지지원과 (☎ 02-2100-642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간병비 및 건강치료비 등 생활안정지원이 확대됩니다.

- 2017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가 3% 인상되며,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 지원금도 1인당 평균 월 37만 9천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또한, 암투병 및 임종 등을 앞둔 피해자에 대한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를 '17년부터 지원합니다.

* 1인당 월평균 630만원(1일 21만원) 지원, 2명분 7,600만원(6개월) 반영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단가 인상〉

구분	'16년	'17년	증감현황
1인당 지원금(평균)	월 269.4만원	월 277.5만원	월 8.1만원 증액
- 생활안정지원금	월 126만원	월 129.8만원	월 3.8만원 증액
- 간병비	월 105.5만원	월 108.7만원	월 3.2만원 증액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월 37.9만원 (연 454.3만원)	월 39만원 (연 467.9만원)	월 1.1만원 증액 (연 13.6만원 증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강화

- 추진배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복지 향상
- 주요내용 ① 생활안정지원금(월 126만원→월 129.8만원) 및
② 간병비(월 105.5만원→월 108.7만원) 인상
③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 지원금 인상(월 37.9만원→월 39만원)
④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 지원
- 시행일 2017년 1월

1.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 외교부 | 여권과 (☎ 02-2002-0111)

중증시각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점자스티커가 부착된 점자여권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 점자여권에는 영문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의 여권정보가 점자로 수록되어, 중증시각 장애인들이 여권정보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중증시각장애인이 전자비자 신청, 항공권, 숙소 등 예약에 필요한 여권정보(영문성명, 여권 번호 등)를 확인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으나, 점자여권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자여권 신규 발급

- 추진배경 중증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익증진
- 주요내용 점자스티커가 부착된 점자여권 발급 개시
- 시행일 2017년 상반기(잠정, 여권법령 개정 후 시행)

1. 낙도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 추가

|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044-200-5461)

지역별 어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하여 추진하는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가 추가됩니다.

* 경상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조선대학교병원

- 의료환경이 열악한 낙도지역 어업인들은 육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병이 있어도 제때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난해부터 지역별 어업안전보건 센터를 통하여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7~10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진료 과목) 혈압, 혈당측정, 무릎 관절염 진료상담 및 약물 처방 등

- '17년도에는 어업인들의 의료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지역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한의사를 활용하여 한의학 진료(침, 뜸 등)도 추가하게 됩니다.

낙도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 추가

- 추진배경 한의학적 치료를 접하기 어려운 섬지역에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한의학 진료 추가 추진
- 주요내용 ① 의료서비스 지역 확대('16년 5개소 ⇒ '17년 10개소)
②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 추가(지역 공중보건한의사 활용)
- 시행일 2017년 7~10월

2. 선원의 유기, 사망 및 부상에 대한 보장 강화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044-200-5745)

선원의 유기, 사망 및 부상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보장을 강화하는 선원법 개정안이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법률개정안은 '17년 1월 18일 발효되는 해사노동협약*(MLC) 2014년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송환비용 및 수당과 식료품, 식수, 연료 등 선내 필수품 공급 비용을 보장하는 유기보험 도입이 주요 내용입니다.

* 선원의 근로여건에 대한 국제협약(국제노동기구)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 비준

- 선원임금채권 보장보험으로 보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보장한도는 3개월 및 3년에서 4개월 및 4년으로 확대하고, 선원 또는 선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유기보험사업자 및 재해보상 보험사업자에 직접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보험사업자의 보험 중도해지가 제한되고 보험가입, 해지, 미갱신 등 보험계약 변동사항을 사후에 알려야 하는 등 선원의 보험금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앞으로도 선원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원의 유기· 사망 및 부상에 관한 선원법 일부개정안

- 추진배경 선원의 유기·사망 및 부상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재정보증 시스템 구축 등 사회안전망 확보
- 주요내용 ① 유기구제보험 신설 및 가입의무 부과, 임금채권보장보험 보장 확대
② 보험급여 직접청구권 보장 및 보험중도해지 제한 등
- 시행일 2017년 1월 18일

국가보훈처

1. 경기동부 및 충남동부 2곳에 보훈지청 신설

| 국가보훈처 | 창조행정담당관 (☎ 044-202-5236)

경기동부지역(용인)과 충남동부지역(천안)에 보훈지청을 신설하여 보훈행정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 그 동안 24개(5개 지방청, 19개 지청)로 운영되어 온 지방보훈관서 체계를 26개(5개 지방청, 21개 지청)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 경기동부보훈지청은 성남·용인·하남·광주·여주·이천·안성시 등을 관할할 예정이며,
- 충남동부보훈지청은 천안·아산·공주시·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열린마당>보훈처 소식>팝업게시판

지청신설 추진 계획

- 추진배경 '17년 1분기 소요정원 배정 확정(행정자치부, '16. 9.7.)
- 주요내용 경기동부 및 충남동부 지역에 지청 신설
 - 1단계 : ('17. 2월)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
 - 2단계 : ('17. 4월) 경기동부보훈지청 및 충남동부보훈지청 개청
- 시행일 2017년 1분기